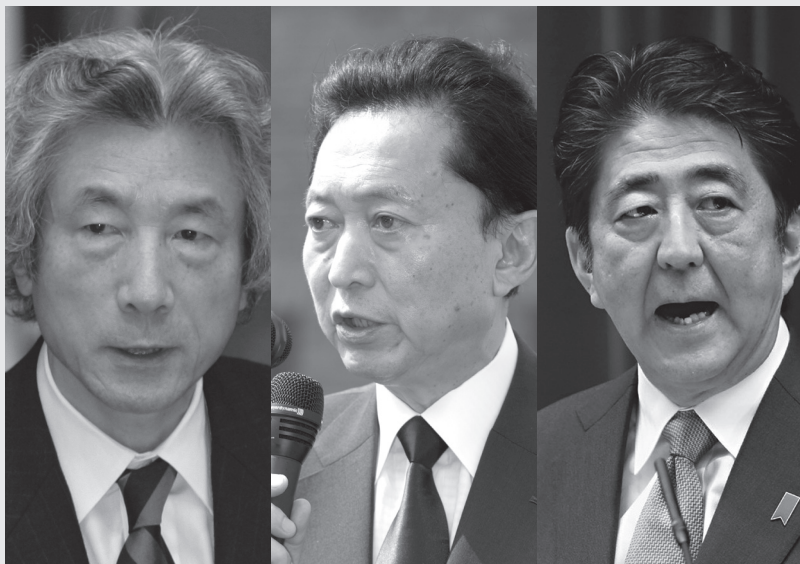


3/ 200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과 정권 변동

신자유주의, 복지주의, 신보수주의*

김용복



김용복(金容福)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일본정치경제, 정치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일본 TPP 참여의 정치경제」,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이 있으며, 저서로 『20세기 유산, 21세기 진로: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위기와 변동』(공저)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3S1A3A2054523)..

1. 머리말

1990년 초 거품경제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일본의 정치, 사회, 외교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야기했다.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의 구조개혁이 경제회복과 격차사회라는 양 극단의 평가를 받으면서 일본경제의 변화를 낳고 있을 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은 일본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2010년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된 해였다. 중국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일본 정치와 경제의 위기감을 낳았고 개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정치의 보수우경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주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있게 보수우경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강경보수세력의 오랜 숙원이던 교육기본법을 개정했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정부안도 통과시켰다.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수우경화 정책은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귀결인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없었는가? 2000년대 들어서서 일본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치적 시도가 있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민주당 정권의 복지국가 노선, 그리고 2차 아베 내각의 신보수주의적 대응들이 대표적이었다. 짧은 기간에 자민당-민주당-자민당으로의 정권변동이 일어났고, 정책적 이념도 신자유주의-복지주의-신보수주의 등의 변화가 있었다.

고이즈미 개혁에 실망한 일본 유권자들은 새로운 리더십과 개혁을 원했는데, 이것은 사상 처음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 즉 민주당 집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다시금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과 보수우경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정권이 정책전환에 성공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일본정치의 방향은 바뀔 수 있었을 것이다. 장기불

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성공’ 혹은 ‘실패’하면서 결국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는가? 장기불황이 지속된 2000년 이후 일본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선거는 2005년, 2009년, 2012년의 중의원 선거였다. 55년 체제가 해체된 이후 2005년 중의원 선거까지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없었다. 2005년 중의원 선거 이후 제1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해 안정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2005년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었고, 2009년 중의원 선거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된 역사적인 결과를, 2012년 중의원 선거는 아베 내각의 재등장을 가져온 결과를 낳았다.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미국경사외교가 중심이었지만, 2009년 민주당 정권에서는 복지주의와 동아시아협력이 정책의 중심이었다. 2012년 이후 아베 내각에서는 미일동맹과 보수우경화 정책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정권의 변화와 정책변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55년 체제 붕괴 이후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무당파층의 증가 등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1994년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의 효과 때문이었다. 소선거구제도와 유권자의 유동성이 결합하여 의석의 쏠림현상을 가져왔던 것이다.¹ 즉 현재 일본의 보수우경화는 민주당 정권의 실패와 아베 내각의 전략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요인과 유권자의 유동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정치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사회적 상실감과 정치적 불신을 낳아 유권자들의 유동성을 확대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거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이념을 제시했는데,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 현재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1 고선규, 「일본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유권자의 유동성」, 『선거연구』 제4권 1호, 한국선거학회, 2014년 봄호.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조건과 유권자의 유동성을 먼저 살펴보고, 고이즈미 내각, 민주당 정권, 아베 내각 순으로 선거와 정책을 고찰하면서 장기불황이 가져다준 정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거제도의 변화와 유권자의 유동성

55년 체제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 일본정치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당 정치의 유동성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 약 35개의 정당이 탄생했다고 한다.² 1994년 말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일본신당 등이 합류하여 신진당이란 단일 야당을 만들었지만, 3년 후에는 다양한 정당으로 분해되고 막을 내렸다. 1996년 9월 결성된 민주당은 1998년 4월 구민주당,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 등이 합류하여 외연을 확대했으며, 2003년 7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의 자유당이 합류하면서 자민당에 대항하는 정당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의 재편이 있었지만, 2003년 이후에는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 어느 정도 정당정치는 안정화되었다.³

〈표 1〉은 55년 체제 붕괴 이후 중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소 불안정한 선거결과였지만, 일본정치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2005년 선거 이후다. 2003년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237석으로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강력한 민주당이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했다. 2005년, 2009년, 2012년 선거 결과를 보면 매우 흥미롭고,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2005년 선거는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선거였다. 2009년 선거에서는 전후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2 현재 일본의 '정당조성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란 국회의원이 5명 이상, 혹은 직전 국정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하고 국회의원을 1명 이상 배출한 정치단체를 의미한다.

3 季武嘉也・武田知己 編, 『日本政黨史』, 吉川弘文館, 2011.

〈표 1〉 2000년대 중의원 선거 결과

회수	실시일	제1당 (의석 수)	제2당 (의석)	제3당 (의석)	제4당 (의석)	제5당 (의석)	제1,2당 의석점유율(%)
41회	1996.10.20	자민당 (239)	신진당 (156)	민주당 (52)	공산당 (26)	사민당 (15)	79
42회	2000.6.25	자민당 (233)	민주당 (127)	공명당 (31)	자유당 (22)	공산당 (20)	75
43회	2003.11.9	자민당 (237)	민주당 (177)	공명당 (34)	공산당 (9)	사민당 (6)	86.3
44회	2005.9.11	자민당 (296)	민주당 (113)	공명당 (31)	공산당 (9)	사민당 (7)	85.2
45회	2009.8.30	민주당 (308)	자민당 (119)	공명당 (21)	공산당 (9)	사민당 (7)	89.0
46회	2012.12.16	자민당 (294)	민주당 (57)	일본유신 회 (54)	공명당 (31)	모두의당 (18)	73.1
47회	2014.12.14	자민당 (291)	민주당 (73)	유신당 (41)	공명당 (35)	공산당 (21)	76.3

출처: 總務省(1996; 2000; 2003; 2005; 2009; 2012; 2014) 참조해 작성.

졌다. 2012년 선거에서는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아베 내각이 들어섰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얻어 안정적으로 집권했다. 2005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296석(의석률 61.7%), 2009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64.2%), 2012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61.3%)을 얻어 4년을 주기로 정치권이 여야로 크게 출렁거렸다. 그리고 정책과 이념의 내용도 크게 요동쳤다. 고이즈미는 신자유주의를 제창했고, 민주당은 복지주의를, 아베는 신보수주의와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 2014년 선거는 2012년 선거의 연장이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와 정권변동이 가능하게 한 데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로 55년 체제라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유지해온 제도였다. 이 제도하에서 자민당은 굳건한 파벌에 기반한 파벌연합적 정당이었다.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선거제도인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는데, 변화의 핵심은 소선거구

제의 도입이었다. 그렇다면 소선거구제의 도입은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첫째, 소선거구제도는 파벌중심의 정당정치를 정당중심으로 바꾸어놓았다. 정당의 이합집산은 과거 파벌정치의 또 다른 표출이었다. 파벌연합 정당은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정당 간 분당이나 합당의 잠재적 가능성은 정당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1990년대 일본의 정당 체계가 유동적 정당정치의 특성을 띤 것도 그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권자들은 사표방지 심리로 인하여, 소선거구제에서 당선 가능한 거대정당 후보들 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점차 축소시키고, 거대정당인 제1, 2당에게 의석이 집중되게끔 인위적으로 만드는 제도다. <표 1>에서 제1, 2당의 의석점유율을 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2003년 이후는 85% 내외를 보이고 있다. 2012년과 2014년 선거결과는 일본유신회란 제3당의 새로운 변수로 75% 내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거대정당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집중되면서 정권변동의 가능성도 높아졌던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정당정치였다.

둘째, 소선거구제도는 다수결의 원리를 정착시켜 정책정향의 변화를 야기했다.⁴ 중선거구제에 기반한 전후 일본정치경제와는 달리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경제는 다수결의 정치를 가져왔으며, 파벌을 쇄퇴시키고 정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정책정향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중선거구제와는 달리 소선거구제는 좀 더 반응적인 정치체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도하에서 정치인들은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이해와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어, 소비자·납세자 등과 같은 보통의 평균적인 일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구하게 된다.

4 F. M. Rosenbluth & M. F. Thies, *Japan Transformed: Political Change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inceton University, 2010, p. 120, p. 185.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적 균형을 경제적 이익집단에서 보통의 유권자로 옮겨가게 했다.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치인들의 동기부여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보통의 유권자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책 선택은 문화적·경제적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어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복지주의 정책을, 아베 내각에서는 보수우경화와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게 했다.

셋째, 소선거구제는 작은 지지율의 변화로도 큰 의석률의 변화를 야기한다. 짧은 기간임에도 정권과 정책이 크게 출렁거린 이유는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도 때문이었다. 즉 비례대표의 득표율과 득표 수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소선거구에서의 약간의 득표율 변화만으로도 중의원 의석은 크게 달라졌다.

〈표 2〉의 비례대표 득표 수와 의석률을 보면 정당지지율이 전체 의석의 변화만큼 출렁거리지는 않았다. 사실 2012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긴 2009년에 비해 비례대표 득표 수는 줄었고, 의석 수도 55석에서 57석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낮은 투표율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어 자민당의 압승을 낳았던 것이다. 결국 전체 선거의 승패에 미친 비례대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고, 소선거구에서의 승리여부가 전체 의석을 좌우했던 것이다.

〈표 3〉은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한 것이다.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으면 의석에서 이득을 보았다는 의미로 이득률을 계산했다. 2005년, 2009년, 2012년 선거에서는 제1당만이 이득을 보았다. 2005년 선거결과를 보면 제1당과 제2당의 득표율 차이는 11.4%인데, 의석률의 차이는 무려 55.7%였다. 2009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의 차이가 8.7%임에도 의석률의 차이는 무려 52.3%였다. 2012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의 차이가 20.2%였지만, 의석률의 차이는 70%나 났다. 1등을 뽑는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는 작은 득표율의 차이도 엄청난 의석률의 차이를 낳는

〈표 2〉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비교

(단위: 천 표)

연도	투표율(%)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기타
2005	67.5	38.18% (25,887) 77석	31.02% (21,036) 61석	13.25% (8,987) 23석	7.25% (4,919) 9석	5.49% (3,719) 6석	신당일본 2.42% (1,643)
2009	69.3	26.73% (18,810) 55석	42.41% (29,844) 87석	11.45% (8,054) 21석	7.03% (4,943) 9석	4.27% (3,006) 4석	국민신당 1.73% (1,219) 3석
2012	59.3	27.62% (16,624) 57석	16.0% (9,628) 30석	11.83% (7,116) 22석	6.13% (3,689) 8석	2.36% (1,420) 1석	일본유신회 20.38% (12,262) 40석

출처: 總務省(2005; 2009; 2012) 참조해 작성.

〈표 3〉 소선거구의 득표율과 의석을 비교

(단위: %)

	2005년			2009년			2012년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득표율	의석률	이득률
자민당	47.8	73.0	25.2	38.7	21.3	-17.4	43.0	79.0	36.0
민주당	36.4	17.3	-19.1	47.4	73.7	26.3	22.8	9.0	-13.8
공명당	1.4	2.7	1.3	1.1	0	-1.1	1.5	0.3	-1.2
공산당	7.3	0	-7.3	4.2	0	-4.2	7.9	0	-7.9
사민당	1.5	0.3	-1.2	2.0	1.0	-1.0	—	—	—
기타	—	—	—	1.0 국민신당	1.0	0	11.6 유신회	4.7	-6.9
기타	—	—	—	—	—	—	5.0 미래당	0.6	-4.4

출처: 總務省(2005; 2009; 2012) 참조해 작성.

다. 유권자들의 작은 지지의 변화로도 의석의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권자의 유동성은 이러한 제도적 효과와 맞물려 정치적 변화를 야기해왔다. 일본 유권자들의 유동성은 무당파층의 증가와 정당지지층의 축소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무당파층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지만,

급증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무당파층이 증가한 것은 1974년 다나카 총리가 금권 문제로 사임할 때, 1989년 리크루트 사건, 1993년 가네마루 금권 문제와 자민당이 분열될 때였다. 대체로 1990년대 초반에는 무당파층이 35% 정도였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약 15%의 무당파가 새롭게 증가되어 50% 정도를 유지해왔다.⁵ 기존의 정당-유권자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증가한 무당파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결정하는데, 선거 운동과 정책들이 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체로 무당파들은 부동층이라서 선거캠페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고이즈미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보여준 결과였으며, 정당지지층이나 무당파층 모두 개혁적 성향을 표출했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겨 정권교체를 이룩한 것은 자민당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후유증과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으로, 정당지지층의 이탈, 무당파층의 민주당으로의 경사 등이 그 원인이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 내각이 재등장한 것에는 민주당 정권의 취약한 리더십과 무능, 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무당파층의 지지 철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 등이 영향을 주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금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의 변화를 야기한 데에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의 정당지지층의 이탈과 더 중요하게는 무당파층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국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적 침체와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치 불신은 유권자들의 정당 이탈과 무당파층의 증가를 낳았고, 무당파층은 장기불황과 격차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따라 유동적 투표를 행함으로써 2000년대 일본의 급격한 정권변동을 야기했다. 유권자의 선호를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선거캠페인이 2005년 이후 제1당에의 의식 집중과 정

5 다나카 아이지(田中愛治) 와세다대학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이 1962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무당파층을 분석했다. 다나카 아이지, 「일본 정당체제의 변용: 1980~1990년대의 변화와 무당파층의 확대」,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202~203쪽.

〈표 4〉 2000년대 일본의 주요 선거와 일본 정부의 변화

성격	수상	시기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자민당 정부	모리 내각	2000. 4~2001. 4		
	고이즈미 내각	2001. 4~2003. 11	43회(2003. 11. 9)	19회(2001. 7. 29)
		2003. 11~2006. 9	44회(2005. 9. 1 1)	20회(2004. 7. 11)
	아베 내각	2006. 9~2007. 9		21회(2007. 7. 29)
	후쿠다 내각	2007. 9~2008. 9		
	아소 내각	2008. 9~2009. 9	45회(2009. 8. 30)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	2009. 9~2010. 6		
	칸 내각	2010. 6~2011. 9		22회(2010. 7. 11)
	노다 내각	2011. 9~2012. 12	46회(2012. 12. 16)	
자민당	아베 내각	2012. 12~현재	47회(2014. 12. 14)	23회(2013. 7. 21)

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와 내각 지지의 변동은 내각의 잦은 교체와 정책혼란을 야기해왔다. 〈표 4〉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부 내각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오랫동안 집권한 고이즈미 내각과 아베 2차 내각을 제외하면, 자민당과 민주당 정부의 내각은 1여년을 주기로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은 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정부였다. 고이즈미 내각, 민주당 정권, 아베 2차 내각은 중요한 정책과 노선을 두고 차이를 보였으며, 그 성공과 실패가 차기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의 정치경제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3. 정권교체의 정치경제: 고이즈미의 ‘성공’과 민주당의 ‘실패’

1)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 신자유주의와 격차사회

일본은 지난 20여년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1981~1990년에는 연 4.65%의 성장을 지속했지만, 1991~2000년의 10년간에는 1.14%, 2001~2012년 사이에는 0.79%의 성장을 보였다. 더욱이 2000~2012년 사이에 연평균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0.3%로 디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있었다.⁶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은 계기는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이었다.

전후 장수 내각으로 손꼽히는 고이즈미 내각이 내세운 것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구조개혁이었다. 고이즈미 내각은 거품경제 붕괴 후 장기불황을 탈피하고자 일본 고유의 경제모델을 ‘신자유주의라는 영미식 모델’로 탈바꿈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우정성 같은 공기업과 국영사업을 민영화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적 고용관행이라 할 수 있는 ‘중신고용’과 ‘연공서열’ 그리고 기업별 노조 역시 약화시켰다. 3중 신기라고 불렸던 이 세 요소는 과거 일본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일본형 복지제도였다. 고이즈미 개혁은 이러한 복지대체형 세 기둥을 허물었던 것이다.⁷ 그리고 우정성 민영화의 반대를 계기로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슬로건으로 하여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우정민영화를 둘러싼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의 대립각을 세워 압승을 거두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모험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던 자민당의 의석 수는 296석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주당은 반개혁적 이미지로 인해 177석에서 113석으로 의석 수가 크게 줄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한마디로 2005년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이 승리를 거둔 선거였다.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과 국제경제의 호조로 일본경제의 성과도 있었다. 1997년부터 전면화된 일본 금융위기는 2002~2003년까지 지속되었

6 지난 20년간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은 1993~1995년, 1998~2002년, 2009년 이후 세 시기로 구분되며, 각각 디플레이션의 핵심요소는 거품경제의 조정, 불량채권의 처리,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이정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일본비평』 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102~103쪽.

7 와타나베 오사무 외 저, 이유철 옮김, 『기रो에 선 일본: 민주당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메이데이, 2010, 36~37쪽.

다. 그것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엔저 기조하에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과정을 가져왔다.⁸ 2002년부터 6년에 걸친 경기회복을 주도한 것은 대기업이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출과 해외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세계경제의 활황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의존했다.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은 과잉설비와 과잉고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의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회복의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비중은 1998년 34.7%에서 2003년 45.8%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1998년 0.4% 감소, 1999년 1.4% 증가했던 것이, 2000년 23.2%, 2001년 14.9%, 2002년 32.3%, 2003년 33.3%, 2006년에는 22.1%로 크게 증가했다.⁹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은 국내경제에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격차사회’라는 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전후 최장기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경기회복은 대기업과 일부 지방에만 나타나고, 가계,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방경제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도시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되어 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 바뀌었다고 비판받는다.¹⁰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전체 노동자 중 정규직은 72.8%에서 67%로 하락한 반면, 계약직과 파견노동의 증가로 비정규직 비중은 27%에서 33%로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고용 형태의 차이는 임금과 복지의 격차로 이어졌다. 정규직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 외에도 이들 간의 실질적인 격차는 더 벌어졌

8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경제회복 시기를 전후 가장 길었던 이자나기 호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통상백서』(通商白書, 2009)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엔저 기조하에서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후 최장인 69개월 동안 경기회복 과정을 거쳤다.

9 김기석, 「일본경제는 어떻게 소생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일본공간』 창간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7, 85~87쪽.

10 加藤裕己, 「環境變化に直面する日本經濟」, 『NIRA 政策レビュー』, 2009년 1월; 高橋進, 「日本經濟の課題」, 『NIRA 政策レビュー』, 2009년 1월.

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통한 비정규직의 증가도 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지만, 지속적인 실질임금 하락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0년대 일본의 격차구조는 세대간 격차와 지역 간 격차가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회복국면에 있는 일본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으면서 2009년에는 일본은 전후 최악의 -5.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위협했다. 결국 일본은 2010년 중국에 제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2011년에는 31년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구치 유기오(野口悠紀雄)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제조업의 국내 생산조건이 악화되어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고, 그 결과 국내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일본경제의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조업을 대신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¹¹

결국 장기적 경제침체에 대응한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은 일본사회를 격차사회로 이끌었고, 일본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감을 심화시켰다.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권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었고, 이는 2007년 참의원 선거와 2009년 중의원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

2) 민주당 정권의 실패: '좌절된 복지국가 노선'과 취약한 리더십

2009년 중의원 선거는 일본정치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선거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2/3에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여 일본의 정치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민당의 위축과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양당

11 野口悠紀雄, 『大震災からの出発: ビジネスモデルの大轉換は可能か』, 東洋経済新報社, 2011.

구도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이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일본사회와 국민들에게 ‘증세 없는 복지’를 전면에 내걸어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복지주의’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¹² 신자유주의의 ‘성공’의 산물로 신자유주의의 불만 세력이 결집하여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집권은 의미가 컸다.

민주당은 2005년 고이즈미의 우정성 선거를 계기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세력을 복지정책으로 흡수하면서 대안정당으로 자리잡았다. 2006년 4월 오자와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생활이 제일”이라는 슬로건하에 반구조개혁, 친복지정당의 이미지로 자민당과의 정책적 대립축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갔다. 즉 자민당이 고이즈미 내각부터 경기회복을 목표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오자와의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민당 이탈과 민주당 지지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제1당으로 올라섰으며,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2009년 선거에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결집했다. 민주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의 대안 세력과 정책의 실험을 의미했다. 민주당 정권의 성공은 일본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길이기도 했으며, 현재의 보수우경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와 기대와는 달리 <표 4>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은 3년 4개월 동안 수상이 세 번이나 교체되면서 단명하고 말았다.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야권의 몰락뿐만 아니라 대안적 이념과 정책이 사라지게 됨을

12 와타나베 오사무 외, 『기रो에 선 일본: 민주당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32쪽.

의미했다. 왜 민주당 정권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일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국가 노선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 선거에서의 승리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상실감과 침체에 빠져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결집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에서 의심을 받았던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주의’는 민주당이 실제로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복지국가 노선을 주도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민주당 내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세력, 개발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세력, 복지국가노선을 지향하는 세력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선거에서 공약한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총리에 오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정위기를 타개할 과제에 직면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과 복지국가노선을 지향하는 세력의 중간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안 되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과 소비세 인상 문제에 완고했던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에 가까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들어서면서, 복지주의의 실현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¹³

민주당 정권은 집권 후 복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재계와 보수언론들도 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비세 인상을 압박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소비세는 1997년에 3%에서 5%로 세율이 인상된 이후 연 10조 엔 전후의 세수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더욱이 일본의 소비세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어서 인상해도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증세 이외의 재원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에서 소비세 인상을 통한 복지로

13 와타나베 오사무 외, 『기묘에 선 일본: 민주당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334~335쪽.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¹⁴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 전환은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컸다. 세계 금융위기와 자연재해와 원전사고는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던 일본 정부에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소비세 인상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⁵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 발표는 민주당을 분열시켰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민주당은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여 과반수 정당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는 민주당 내각의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참의원에서 야당인 자민당의 동의 없이는 입법이 어려워진 이른바 중참 분할의회가 만들어졌다.¹⁶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308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었고, 사민당(7석) 및 국민신당(3석)과 연립내각을 구성했지만, 2/3 정족수인 32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2/3 의석을 확보하면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노다(野田佳彦) 내각은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2012년 6월에는 소비세 법안을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의 합의로 중의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 내 오자와 그룹은 탈당했고,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무려 251석이 감소된 57석을 얻어 역사적인 패배를 하고,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몰락했다.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을 제도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보수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정책이자 정권교

14 일본정치에서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무덤’으로 통한다. 그래서 1998년부터 약 10년 동안, 자민-공명 연립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15 정미애, 「일본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둘러싼 정치과정」, 『국제정치논총』 53권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16 가와토 사다후미, 「일본 양원제하에서의 여야 역전과 정권운영」, 『선거연구』 제2권 1호, 2012년 봄호, 122쪽.

체의 원동력이었던 보편적 복지주의를 대폭 후퇴시켜야 했다.

물론 민주당의 참패는 소비세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주당 정권은 3년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3명의 수상이 바뀌면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외적 민족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미국과 오키나와 공군기지 문제로, 간 내각은 중국과 동중국해 문제로, 노다 내각은 한국과의 영토 문제로 모두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러한 외교적 무능력은 결과적으로 보수세력의 민족주의 동원을 조장했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로 일본경제가 위기를 맞았지만, 민주당은 당내 갈등과 중참 분할의회로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더욱이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민주당 정권의 신뢰를 붕괴시켰다. 재난 수습을 위한 적자국채법안과 보정예산안 성립을 위해서 자민당의 협조가 필요했던 민주당 내각은 간 총리의 퇴진과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라는 자민당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세 인상 문제는 복지정책의 후퇴를 의미하지만, TPP(환태평양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는 일본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했다. 2010년 간 나오토 총리는 “제3의 개국”이라고 말하며 TPP 참여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지만,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TPP 참여를 더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뒤를 이은 노다 총리는 TPP 참가를 목표로 관계국과의 협의를 발표했다. TPP는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와 부흥의 수단이자, 불안정한 국제금융의 상황에 의해 엔고가 수반하는 일본경제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주목되었다. TPP는 대지진 이후 엔고에 의해 일본의 수출이 고전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TPP 참여를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었다.¹⁷

17 金暎根,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經濟と通商政策: TPP政策を中心に」, 『일본연구논총』 제35호, 현대일본

결국 민주당 정권은 선거에 승리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복지주의를 축소하고 소비세를 인상했고 TPP 참여 선언으로 신자유주의로 경사되었다. 더욱이 외교적 갈등으로 배외적 민족주의를 배양하고 허약한 리더십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일본,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성공’이 민주당 정권을 낳았다면, 민주당 정권의 ‘실패’가 아베 내각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복지주의로 바꾸려는 민주당의 정책이 허무하게 실패하면서, 장기불황에 대응한 정책적 선택지가 아베 신조의 신보수주의와 아베노믹스로 좁혀지게 되었다.

4.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신보수주의와 아베노믹스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민족주의와 일본의 전통, 가족, 국가 재건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신국가주의라는 이념을 가진 강경한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운 아베는 1차 집권(2006.9~2007.9)을 했을 때에도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 발언과 정책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2005년에는 종군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언해 고노 담화를 정면 부정했고, 2006년 10월에는 A급 전범에 대해 전쟁범죄자였다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발언을 수정해 “국내법적으로는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차 재임기간에 교육기본법을 고쳐, 애국심을 하나의 교육목표로 추가했으며,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헌법 개정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아베 1차 내각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신보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존한 보수우경화 정책을 추진하여 장기적 경제침체와 격차사회로 사회적 불안감과 상실감이 심화되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

학회, 2012.

문이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는 민주당 정권의 실패와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허약한 리더십과 허울뿐이던 복지주의는 아베 내각의 강력한 리더십과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로 대체되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국방력과 영토지배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정책은 강한 일본을 꿈꾸는 보수 우익세력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추진되었다.¹⁸ ‘일본이 돌아왔다’는 슬로건하에서 ‘강한 일본’의 부활을 호소하는 아베 총리는 일본사회가 요구하는 강한 리더십에 부합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내각은 과거와 전통의 정당화,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과 같은 우경화정책, 아베 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성장정책,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미일동맹 강화와 TPP 가입과 같은 대외정책 그리고 지역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는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각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추진과 민주당의 몰락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 때문이다.¹⁹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정권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긴축 재정정책으로 경제불황과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정책실패를 보였지만, 아베 내각은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엔저를 유도하여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과감하고 일관된 경제정책의 추진은 아베 내각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다.

18 일본회의가 대표적인 강경보수세력인데, 이들은 헌법 개정에 의한 천황제 국가의 부활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대의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내각총리의 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베 신조였다. 아베 내각에 일본회의 소속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2014년 여름 개조 내각 각료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의 멤버였다.

19 기노시타 지가야, 「아베 정권에서 일본은 우익화했는가」,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4.

1) 아베 총리의 보수우경화: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

탈냉전과 일본의 장기불황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분출시켰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이었다. 보통국가론이란 일본의 경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안보적 역량도 강화하고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평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반적으로 경제강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외교강국과 군사강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아베는 이러한 보통국가론에 과거사를 미화하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강경보수 논리까지 확대하여 국가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²⁰ 상당히 뿌리 깊은 강경보수세력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및 한국과의 외교 갈등은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내적으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족, 무기 수출 3원칙의 철폐,²¹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같은 과감한 군사적 보통국가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보수세력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 해석은 주권국가인 일본이 국제법상 당연히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9조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내각에서는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결국 2015년 9월 19일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법안이 참의원을 최종 통과했다. 사실 전후 일본을 청산하기 위한 아베 내각의 최종 목표는 전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개정이고, 그

20 수정주의(revisionism)란 학계나 사회가 일반적으로 합의해오던 인식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수정주의란 전후 지속되어온 역사관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총칭한다.

21 냉전시대 일본은 공사권, 유엔결의에 의해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등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다.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의 개정이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은 사실상 전후체제를 지탱해온 헌법 9조의 형해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일본정치의 보수우경화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²² 그러나 현재의 보수우경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²³ 그동안의 우경화가 간헐적·유동적이었다면, 현재는 지속화·제도화되고 있으며, 과거는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되었다면, 현재는 민간 차원, 젊은층, 매스미디어 등 대중화 양상을 띠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로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수우경화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확대되어왔다. 첫째,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한정된 국가 수입구조에서 복지예산의 삭감을 낳았고, 이는 지방과 도시의 격차, 빈부의 격차 등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해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을 확산시켰다.

둘째, 국제적인 환경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일본국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다.²⁴ 특히 중국의 대두, 한국과의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은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양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보수강경파 정치인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2010년 일본 해양순시선과 중국 어선간 충돌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보복조치가 있었으며, 또 2010년을 계기로 중일간 경제규모가 역전되었으며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센카구열도 문제,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 문제 등으로 동북아 주변국과 모두 영토분쟁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영토 문제는 모든 국가에 있어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어려운 이슈이며, 국내정치적으로 민족주의적 지지

22 보수화의 개념은 이면우, 『일본정계의 ‘우익’ 성향 강화와 동북아: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4-3, 9쪽 참조.

23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 사회』, 통권 제101호, 비판사회학회, 2014 봄호, 55쪽.

24 홍성후, 「일본 아베정부의 보수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0호, 2014.

를 결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 문제는 보수강경과 정치가들의 지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어왔다. 대북강경과로서 입지를 다져 정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아베 신조였다.

셋째, 민주당 및 리버럴한 정치세력의 무능과 분열은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정치인들의 보수화를 추동해왔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태에서 보여준 민주당 내각의 무능은 강력한 리더십을 주창한 강경보수세력으로의 결집을 가져왔으며, 강경보수파들이 자민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보수 우파 성향의 의원 수가 증가한 반면에 중도노선 내지 리버럴 성향이 강한 파벌의 의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 국회의원 가운데 보수우파성향의 의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일본 국민의 생활보수주의적 성향도 보수우경화에 동원되어왔다.²⁵ 공동체로의 내향적 성격을 지니는 생활보수주의는 가치관 차원에서 폐쇄적 성향의 공공성 인식이라는 특징과 정치적 영향 차원에서 정치 이슈의 미시화와 거시적 정치 이슈에 대한 정서주의적 태도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사회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관심사 이외의 거대 이슈에 대해 무관심 또는 방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생활보수주의는 정치인들의 민족주의, 신보수주의적 동원에 활용되는 토대가 되어, 일본정치의 보수우경화를 촉진해왔다.

결국 일본의 보수우경화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일본 리더십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전통, 권위, 공동체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와 일본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민족주의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일본의 우경화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를 두고 신보수주의의 가치관과 결합된 것이다. 민족주의는 스스로 속한 민족 혹은 국가에 대해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의식과 행동이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민족과

25 이정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100쪽.

전통을 중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일본정체성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전후 역사관의 재검토, 즉 역사수정주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신보수주의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존재로서의 전통적 단위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목적론적 도덕윤리’에 입각하여 가치통합적인 공동체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²⁶

일본에서 신보수주의는 전후 우익들의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 신보수주의가 주목하는 전후체제의 문제점은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본 국가의 국내적·국제적 정책 방향성이다. 개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제도와 문화는 극복의 대상이 된다. 전후 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다. 일본의 신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열망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이란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대중주의 방식으로 다수 시민의 보수적 결집과 연대를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정치적 동원체계다. 더욱이 일본의 신보수주의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지향으로 동요될 수 있는 정치적 지지의 동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상징조작을 이용했다.

2) 아베노믹스의 목표와 한계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아베 정권하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화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엔저를 유도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보정예산을 집행하여 긴급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다는 신속한 재정정책의 추진이다. 셋째,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신성장 전략을 육성하기 위해

26 선우현, 「신보수주의의 철학적 기초: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통권 5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겨울, 251~283쪽.

서 산업부흥, 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전략 등 3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엔저를 유도하고 내수를 자극하여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신성장 전략은 일본경제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일본경제의 장기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성장전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성장전략은 TPP 참가, 규제개혁, 원전 재가동,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기업친화적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 환경의 호전과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기업의 실적 개선과 고용소득 증가 그리고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라는 3개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대담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엔저 기조가 정착되었는데, 2012년 말 86.3엔에서 2015년 말 120.4엔으로 39.5% 상승하여 엔저가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또한 재정정책의 투자를 통해 과감한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그동안 네 차례의 경제대책을 추진하여 총 19.9조 엔의 추경예산을 투입했다. ① 2013년 6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13.1조 엔) ② 2013년 10월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5.5조 엔) ③ 2014년 12월 “지방에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긴급경제대책”(3.5조 엔) ④ 2015년 12월 “1억 총활약사회만들기”(3.3조 엔) 등 총 25.4조 엔의 국가재정을 투입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정되었던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다.

또한 아베 내각은 TPP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TPP에는 반대하겠다는 선거공약과는 달리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내각은 다소의 논란을 거쳐 2013년 3월 15일 일본의 TPP 참여를 공식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모두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이 내부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고집하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²⁷

아베노믹스는 초기 2013~2014년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기조는 개선되어 아베 집권 후 3년 동안 (2013~2015) 소비자물가는 평균 1.3% 상승했다. 또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주가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고용자 수도 증가했으며, 기업도산 건수도 감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재정건전화 전략이 빠진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중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통화팽창적이고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인 아베노믹스로는 늘어나는 국채를 막을 수가 없었다. GDP 대비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GDP의 240%인 1,008조 엔에 이르렀다.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성장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0%대 성장을 지속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2017년 4월로 연기한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에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475석 중 2/3가 넘는 326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마저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기업친화적 정책들은 경기부양책에만 집중한 나머지, 격차사회의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일본 국민의 실질소득이 상승하도록 정책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아베노믹스는 뚜렷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을 아베 내각에서도 해결해야 하는데, 친기업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27 『朝日新聞』, 2013. 3. 16.

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통해 엔저를 강하게 유도한 것은 ‘수출 실적 개선→고용 확대, 가계소득 증대→소비·투자 활성화→물가상승 및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예상과는 달리 대내외적인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국제경제가 악화되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일본의 엔화가 엔저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면서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아베노믹스는 국제경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해외시장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에 좀 더 정책적인 목표를 두어야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재정건전화 전략과 격차해소 방안의 부재,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 구축 등 좀 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가 결합된 경제성장정책으로 국한되어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5. 맺음말

20여년 지속된 경제의 장기침체로 말미암아 일본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식 자본주의의 해체, ‘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의 이행, 동아시아공동체론에서 미일동맹론으로 경사, 신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고양 등 큰 물결이 일본의 정치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장기불황에 대응한 고이즈미 내각, 민주당 정권, 아베 내각은 각각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노선, 신보수주의와 아베노믹스 등의 이념과 정책을 내걸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신자

유주의적 구조개혁은 일종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대가로 야당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민주당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국가론은 좌절되고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에 길을 비켜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적 유권자들의 지지 변화는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획기적인 정치변화를 연출했다.

적은 득표율의 변화로도 엄청난 의석률의 차이를 가져와서 자민당이 독주하거나 정권이 교체되었던 것이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온 자민당의 아베 내각은 소비세 인상 보류를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014년 12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지리멸렬과 아베의 리더십에 힘입어 2/3가 넘는 326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으로 재집권했다. 다시금 아베 내각의 보수우경화 정책과 아베노믹스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전후체제의 탈피’를 외치는 아베의 보수우경화 정책은 일본사회를 분열시키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성장전략이 성공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처방이 제시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신보수적 처방만으로는 일본사회와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 있다. 아베의 보수우경화는 국내적으로 ‘강한 일본’과 ‘보통국가’를 지향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불황이 가져온 일본 정치경제시스템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유동적’ 정치시스템은 어떠한 구조로 안정화될 것인지, 일본사회의 불안감과 상실감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은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베 내각의 노선과 정책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베 내각의 독주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야당들의 힘이 취약하고, 시민사회 역시 정치적 동원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포함한 정치적 결정

에서 일본 국민의 선택이 아베 내각의 미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